

경제

11·3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지방 미분양 2년내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도 양도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안하기로

정부가 경제난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기로는 했는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중 300%, 2중 250%, 1중 200% 등으로 돼 있다. 시도는 이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법정 한도까지 용적률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임대주택의 무비용은 어떻게 되나. ▲임대주택의 무비용은 폐지된다.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지어야 한다. 이 비율은 지자체가 30-50% 범위에서 정한다. 정비계획상 용적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형주택을 일

정비율 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어떻게 되나. ▲미분양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를 당초 검토대상으로 올렸으나, 그러나 지금 폐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빠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대책이다.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가격 불안 가능성은 없는지.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불안기에 과도하게 설정했던 규제를 정상화·합리화하는 차원이다. 올해 들어 재건축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위축, 공급 확대 효과 등으로 크게 안정된 상황이므로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불안 가능성은 적을 전망이다. 개발이의 대대 가격이 상승할 경우, 초과이익부담금이 부과

때 과도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되므로 시장불안은 없을 것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에 달라지는 내용은. ▲2010년 말까지 취득하는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주후 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오늘(3일)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현재 미분양인 주택뿐 아니라 3일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자가 분양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양도세 감면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로 목적으로 지방소재 주택을 1개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 지방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공과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한다. /연합뉴스



'10만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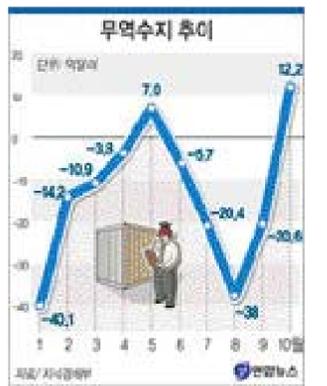
청년실업 해소를 목표로 한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정부가 대학 캠퍼스를 직접 찾아 나선 가운데 3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해외취업 연수자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 봉사자 2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글로벌 청년 리더'를 키워낸다는 범정부적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무역수지 5개월만에 흑자 전환

10월 12억2000만달러 ... 對中 수출은 적자 반전

10월 무역수지가 12억 달러 흑자를 내면서 5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실물경제의 침체로 수출 증가율이 투자위수에 턱걸이했지만 유가 하락으로 수입 증가율도 크게 낮아지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월간 흑자를 달성했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378억9천만 달러, 수입은 366억7천만 달러로 12억2천만 달러의 월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1~10월 무역수지 누적적자는 134억5천만 달러로 줄었으나 지경부가 지난달 수정한 전망치인 연간 60억 달러 적자 달성은 무산됐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올해 무역수지는 11~12월에 40억 달러 흑자를 연간으로 90억 달러 내외의 적자는 감내해야 한다"며 "고 말했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0% 증

가져 그쳐 올해 1~9월의 증가율 22.7%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수입 역시 12.0% 증가해 1~9월의 증가율 34.2%보다 큰 폭으로 둔화됐다. 주력 품목별 수출을 보면 자동차(-14%)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의 경기 침체로 투자위수의 감소세를 보였고 반도체(-26%)와 가전(-28%), 컴퓨터(-37%) 등도 크리스마스 특수가 실종되면서 급감했다. 섬유류(6%)와 자동차부품(6%), 일반기계(4%) 등도 실물경제의 침체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내려 앉았다. 다만 선박(118%)은 안정된 수출물량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고 석유제품(45%)과 철강(40%), 무선통신기기(14%) 등도 투자위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지난달 1~20일 지역별 수출을 보면 대(對) 중남미(32.1%)와 중동(22.4%), 대양주(20.



9%), 미국(10.8%) 등은 투자위수의 호조를 보였지만 아세안(6.3%), 일본(5.5%)은 한자릿수 증가세에 그치고 중국(-1.8%)과 유럽연합(-8.2%)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입은 원유와 원자재의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가 뚜렷했다. 원자재 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2% 급증했지만 9월에 비해서는 원유(-13%), 석유제품(-44%), 철강제품(-20%) 등의 수입액이 크게 줄었다. /연합뉴스

지방 SOC 확충 4조6천억 중기·농어업인에 3조4천억

확대 재정 11조원 어디에 쓰이나

정부가 3일 최근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출 10조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수정예산안을 마련,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수입은 당초 전망(179조6천억원) 대비 1조9천억원 감소한 177조7천억원으로 수정하고 지출은 재정분야 10조원, 공기업투자 포함 11조원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늘어난 재정은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4조6천억원이 쓰인다. 기간 교통·물류 시설 조기완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도 시설 개량사업 확대가 주

대상이다. 정부는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작금 추진하는데 8천750억원, 새만금, 행복도시 등 지방 성장거점 투자확대에 5천350억원을 투자하고 지방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도 2조1천248억원을 투입한다. 고용효과가 크고 지방 중소기업 참여가 쉬운 중소 지방시설 개량에도 8천381억원, 미래 대비 물관리에도 7천800억원이 책정됐다. 두번째로 많은 항목은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 분야로 모두 3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중소기업에 시설자금 및 기술

사업화 자금 신규 융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확대 등으로 4천400억원이,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보험출연 등에 2천700억원이 들어간다.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은행 출자에도 1조3천억원이 배정되며 중소기업 자금정책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7조5천억원) 및 정책자금(6천억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의 70% 이상을 지방중소기업에 배정키로 했다.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정책자금도 1조5천억원 확대한다.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는 1조원이 쓰인다. 또 청년 등 실업대책을 강화하는데도 3천억원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조1천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연합뉴스

별드는 증시 ... 반등 목표치 높인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전방위 경기부양책이 과매도 상태에서 상승을 모색하는 증시에 상승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이는 건설 부문에 대한 과감한 정책지원은 건설업종은 물론 금융, 소비 등의 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증시의

안도 랠리를 연장하고 반등 목표치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가에서는 당초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덕분에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증시가 1,200선 부근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례는 1,500선까지 반등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연합뉴스

14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출 확대와 서민 가계 지원 방안은 국내 경기 둔화와 소비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여가다 6일 유럽중앙은행의 금융정책회의와 7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등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국내 증시의 얼어붙은 투자심리의 악화를 막고 더 나아가 상승 기대감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연합뉴스

정부 채무 지급보증 대가 은행권에 금리 인하 유도

금감원, 주내 MOU 체결

금융당국이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의 대가를 은행들에게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만기연장과 금리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초에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18개 은행에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MOU를 개별은행들과 체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협의해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정부 지급보증 채무의 용도를 만기 도래한 채무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한정하고 은행이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해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

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 유동성 공급 계획을 제출 받고 서민가계 대출 및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가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차원에서 시장성 수선비중 개선 등 자금조달 구조 합리화 계획을 은행별로 제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최근 몇년 동안 예금금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분별하게 은행채 및 양도성에 보증증권(CD)을 발행해 시중금리를 높여왔다. /연합뉴스

금융시장 급속 안정

코스피지수 16포인트 올라 원·달러 환율도 29원 하락

국내 금융시장이 정부의 경제종합대책 발표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의 여파로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 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02포인트(1.44%) 오른 1,129.08로 마감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도 17.53포인트(5.69%) 상승한 325.56으로 장을 마쳐 양 시장 모두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또 이날 코스피·코스닥시장은 개장 후 선물가격의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국내증시 안정은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와 글로벌증시 상승 속에 정부의 경제대책 등의 호재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외환시장도 안정세를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29.00원 떨어진 1,26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정부의 경제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환율이 급락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미국에 이어 중국·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키로 하면서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완화됐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외화예금 5천만원까지 원리금 보장'

외화예금도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원화에금처럼 5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외화예금의 원리금을 부분 보장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예금도 원화에금과 형평성을 맞춰 1억원 5천만 원 한도에서 예금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외화 예수금은 지난 7월 말 현재 375억 달러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회사가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개인을 중심으로 외화예금이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Job Name, Department, Qualifications, Application Period, Interview Date, and Contact Info. Includes various job openings like '정원외도', '포드자동차주서비스', '일광', etc.

올 중부세 부과는 '중전대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계획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전국의 중부세 납부자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올해부터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 법 개정이나 현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기존법이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정부가 행정적으로 이를 처리하기 힘든 상황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회청에 따르면 지난 9월22일 중부세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의 발표 가운데 올해 적용될 내용의 핵심은 ▲과표적용률의 작년수준(80%) 동결 ▲세 부담 상한 150%로 인하 등

두 가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자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이 법안은 중부세 고지서 발송일(11월25일)까지 3주 남짓 남은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세액 산정을 위해 관련 부처들의 자료를 종합한 뒤 이를 분석해 세액을 결정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에따라 국회청이 만든 중부세 안내리플렛에는 올해 과표적용률을 90%로 명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SK Telecom featuring a red banner with text: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료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